

大學教授와 現實參與

李 鍾 旼

(啓明大 社會學科)

1. 머리말

대학교수는 어느 사회의 지성인의 전부는 물론 아니나, 가장 주요한 집단 혹은 최소한 가장 주요한 집단의 하나라고는 할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 知性的 役割이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고전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여 보자. 지성이란 무엇보다도 사회적, 따라서 역사적 차원에서 自己省察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성 그리고 이의 전문적 담지자로서의 지성인 혹은 지성인집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역사적 위기의 순간에서 지성은 그 사회와 역사의 향방을 제시하여야 하는 임무를 저버릴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세력과 권력은 항상 비판적 지성과 긴장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지배의 양태가 獨裁的·專制的일 때, 이는 항상 그 시대의 비판적 지성의 탄압과 수난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성인의 수난이라는 것은 역사의 진보를 유지한 주요한 동력의 하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독재와 전제의 역사는 바로 知性的 受難史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 이후 대학교육이 점차 대중화되고 제도로서의 대학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

차 대학은 근대사회 지성의 중심으로서 자리잡아 갔다. 따라서 批判的·抵抗的 知性的 중심인 대학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었으며, 이 가운데에서 학생운동과 교수집단의 행동은 현대 사회운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부상하였다.

일제의 민족지배 이래 학생운동이 항일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부언할 필요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일제시대 학생운동의 대중적 중심점은 고등교육기관의 미발달로 인하여 오늘날의 중·고등학교에 있었으며, 대학생이 學生運動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은 해방 후, 특히 '60년대 4·19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첨언해 둔다. 그리고 사회집단으로서의 大學教授의 現實參與도 4·19 혁명의 와중에서 비로소 부각되기에 이르며, 이후 한국사회의 전환기마다 교수집단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렇게 대학과 교수사회가 현실문제에 대하여 검증하는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대학사회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韓國의 知性史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수의 현실참여는 '60년대 이후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의 위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現實參與의 두 가지 形態

앞에서 교수의 현실참여라 하면 이는 주로 비판적·저항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現實參與의 意味를 보다 광범하게, 즉 직접적인 전공분야 연구나 학생에 대한 학과지도 이외의 사회활동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반드시 저항적인, 따라서 정치적인 행위에 국한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1945년의 해방과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한국사회는 다양한 현대사회의 과제를 제한된 시간내에 해결하려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추구되었는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도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 혹은 한국국가가 당면하였고 또 지금도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사회생활에 있어서 광범한 의미에서의 '民主主義' 실현이라고 불리워지는 진보적·민주적 관계의 창출이다. 다음에는 흔히 자립경제의 건설이라고 일컬어졌던 강력한 국민경제의 건설이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다같이 광범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필요로 하였는데, 다양한 형태의 지식인 참여는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었다.

여기에서 일단의 지식인은 경제·과학 건설에 技術的·機能的 知識人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다른 일단의 지식인은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창출하고 입증하는 작업에 가담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의 비민주성과 '60년대 이래의 경제건설 방향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抵抗運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지식인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60년대 이래 한국사회를 양분하였던 民主 대 獨裁의 구도는 지식인사회 일반 그리고 교수사회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수가 집단으로서 정치적인 사를 표시하고, 이것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 최초의 계기는 1960년 4월혁명 당시의 4·25 대학교수단의 데모였다. 이는 당시 이승만정권의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이 국가경영과 기획에 본격적으로 참여

하게 되는 것은 1961년의 5·16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후 1972년의 유신체제 출범 이후에는 이 체제를 정당화하며 변호하고 나선 일단의 이론가가 등장하였다.

결국 '6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의 교수의 현실참여는 친정부적이냐 혹은 반정부적이냐는 것만에 의해서 黑·白으로 갈라지기 일쑤였다. 따라서 어용교수와 민주교수라는 용어가 발생하였으며, 교수의 현실참여는 어용과 민주화운동으로 흔히 구분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에 의한 教授社會의 二分化는 '70년대 이래 한국사회가 가졌던 비극의 일단이었다. '70년대 이래의 개개교수들 그리고 교수집단의 현실참여의 공과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큰 논쟁을 요구하는 사안이며, 현재의 시점은 그러한 역사적 판단을 내리기에 너무 이롭지 못하다. 이러한 개개의 사례에 관한 판단은 후일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일단 '70년대 이래의 抵抗의 知性的 흐름을 살펴보고, 그 흐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과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3. 民主化運動과 教授의 現實參與

교수가 지도적인 시민으로서 또 자기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현실정치에 대하여 발언하거나, 발언을 넘어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이는 전혀 의외의 사실도 아니며 본분을 저버린 일로 지탄받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정치나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한 혐오증이 광범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교수가 어떤 입장에서건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관계하는 것을 그리 아름답지 않게 보는 시각을 많은 사람이 지니고 있다. 이는 정권이나 집권당에 관여하는 소위 '權力指向型'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집권세력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투쟁하여 온 '民主化指向型'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수는 연구와 학원 안에서의 자기과제에 몰두해야지 세속사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교수가 현실에 관여하는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학문적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學問主義的' 입장은 꼭 보수

적 입장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간 '80 년대에 해직을 당하는 고초를 겪으며 각종 민주적 흐름에 자신을 아끼지 않은 원로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심사숙고할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다. 교수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學問과 研究에 있다는 이러한 '학문주의' 혹은 '연구주의' 적 입장은 과거 파시즘과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대격앙을 겪은 서구의 석학들에게서도 종종 나타난다. 과연 어디까지의 참여가 知性과 良心이며 어디부터가 본분을 어기는 것인가는 때론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문제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學問主義와 參與主義는 양자택일할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최근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결정적 논점을 이루었던 적도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향후 교수의 현실참여와 관련하여 겹쳐져 부각될 쟁점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제까지의 한국정치와 사회상황이 일종의 비상사태 혹은 위기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도 그러한 비상사태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느냐의 논의와 관련된다. 유신과 5공치하에서 사실 연구나 참여나를 놓고 고민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70, '80 년대의 '해직교수' 혹은 소위 '민주교수'들에게 이것은 거의 문제거리가 아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 '70, '80 년대는 그리고 희망하던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예외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극한상황에서 지성의 발언과 행동이 '研究主義的' 관점에서 비판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유신독재와 군사독재하에서 대학교수를 위시한 지식인의 민주화운동 참여는 전체 민주화운동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서 발생했던 지식인의 수난과 희생은 한국 지성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독재정권하에서 교육이 자주성을 상실하고 집권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던 시절에 이러한 지식인과 교수들의 저항은 학생층과 일반시민의 정치의식을 각성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여겨진다. 특히 1986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운동기에 있어서 교력대를 필두로 한 대학교수들의 개헌

서명운동은 1987년의 개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86년부터의 개헌서명운동은 '87년에 들어 한국 대학사상 처음으로 대학교수들의 상설 민주화운동 기구로서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약칭 민교협)를 결성해 내기에 이른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전국 각 대학에서는 역시 개헌서명운동과 민교협 결성에 이어서 대학의 자치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결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民教協과 教授協議會의 출현은 6·29 선언, 직선제 대통령선거 실시 그리고 6공 정권의 출범이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88년 이후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교수의 현실참여와 對사회발언은 유신과 5공치하의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아직도 본질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속하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건간에 이는 유신과 5공시절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형태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깊은 모색이 있어야 하겠다.

4. 全教組, 民教協, 教授協議會

'88년 6공 정권이 수립된 이후 한국사회는 노동운동을 위시하여 각계각층에서 북돋아져 나오는 민주화와 자기이해의 관철을 요구하는 각종 움직임을 경험하였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또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진 운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 움직임으로 나타난 초·중·고 교사들의 教育民主化 운동이었다. '89년에 결성을 선언하고 나온 이 전교조운동은 6공 정권과의 전면대결을 가져와 결국 1,500명이 넘는 교사들이 해직당하는 한국 교육계의 일대참사를 빚었다. 과거 유신, 5공 시절에는 불가능했을 이런 운동의 존재 자체 역시 변화된 시대환경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원래 교수들은 전교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전국교사협의회나 전교조의 주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수도 교사와 같이 教育現場의 民主化·人間化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주장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많은 진보성향 교수의 공감을 얻었다. 거기에다 정권의 탄압에 직면한 전교조 교사들과 연대하여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는 결국 상당수 교수로 하여금 전교조에 동참하게 하였다. 전교조라는 과거와는 다른 組織運動 방식이 등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우선 이체는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뿐 아니라 사회 각 계층·부분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과 운동이 대세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직은 과거와 달리 소규모 서클이나 지하화된 권위조직이 아니라 공개 대중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직과 운동은 결국 합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이 결국 전면적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민교협이나 교수협의회 운동도 결국 위에서 열거한 시사점과 비슷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의 입장에서 전교조는 보다 도덕성과 연대성이 강한 단체였던 데 반해 민교협과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자기운동이었고 자기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기본적으로 對 사회적·정치적 과제를 위한 교수들의 조직은 아니다. 이것은 대학자치와 학내민주화를 위한 자율적 결사체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민교협은 학원민주화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해 내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것까지를 자기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내에서의 일상적 과제를 담당해 내는 교수협의회와 이를 초월하는 대학·사회의 민주화라는 보다 정치적인 과제를 담당하는 민교협이라는 두 개의 질적으로 상이한 조직이 '87년 이후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여기에서 민교협은 가입과 탈퇴가 완전히 자발적인 결사체임에 반해 교수협의회는 대개의 경우 자동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대학사회의 공식·준공식적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과거 '70, '80년대 교수의 민주화운동과 현실참여의 맥은 이제 民敎協으로 이어나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 주목하여야 할 것은 教授協議會의 향후 성격과 위상 문제이다. 학원의 자율과 자치라는 애초의 진보적 성격은 이것이 전원가입 원칙, 교수협의회의 공식·준공식화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전반의 保守化와 아울러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노동조합이 탄생기의 진보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는 사례를 우리가 서구의 노동운동에서 목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교수사회란 교수들의 사회적 위치와 배경으로 인하여 쉽게 보수화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실 교수들이 사회의 指導的 知性으로서 구실하려면, 자신의 사회적 속성을 뛰어넘어 사회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적 수준의 한국교수들에게 이러한 社會的 知性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수협의회가 대학의 자율·자치를 담보하는 기관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는 오히려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획득은 그 자체가 역사적 성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6공 초기에 나타난 民主改革의 가능성이 도처에서 후퇴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몇 년간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는 대학의 비리·비민주성을 기본적으로 정권의 독재적 성격으로 돌릴 수 있었으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학사회는 스스로 자율·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사회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권위주의적 혹은 독재정권의 출현과 존속을 가능케 하였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사회의 취약성이란 바로 그간의 독재정권이 남겨놓은 역사적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과정과 진행은 여전히 혼미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6 공에 들어 어쨌건 민주화는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이제 민주화의 완결로 가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완성론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다.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민주화로 가는 데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이는 언제나 좌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점에서 學園과 社會民主化에 기여하기 위한 교수의 현실참여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바로 여기에 민교협의 고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現實과 展望

전교조의 대량 해직사태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법체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대중조직의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진보와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세력은 대중조직의 건설노력과 아울러 자기대중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조직 내지는 정당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특히 권력교체 혹은 세력재편의 계기가 되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改革과 進歩를 추구하는 교수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90년 이후에 교수 중에는 합법진보정당의 결성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나타나게 된다. 민중당으로 구체화된 이 합법진보정당에는 비월에 있어서 기존의 어느 보수정당보다도 교수들의 참여가 높았으며, 이들은 당내에서 실제로 상당히 주요한 위치와 역할을 가졌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운동세력 혹은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 및 정당결성은 잘 알다시피 '92년 3·24 총선에서 민중당의 좌절로 일대 타격을 입었고, 새로운 정당결성은 가까운 시일내에 전당하기 힘든 형편이다. 집권당이나 보수야당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보', '차문'이 아닌, 교수들이 하나의 단위부문으로 정당건설에 참여한 한국정치사의 독특한 사례는 이로써 일단락 지어졌으나, 이 시도는 새로운 정치조직의 형태로서 부분적으로는 계승될 것으로 보여진다.

'70, '80년대 민주화투쟁의 전통을 계승한 민교협은 민족민주운동 혹은 민중운동적 입장에

서서 한국사회의 개혁과 진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전환기의 정세 속에서 민중운동 전체가 이념적·실천적 혼돈과 고민 속에 있으므로 현정세의 판단과 향후 진로에 관한 연구자와 교수들의 발언은 고대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현실을 自己課題로 삼아 연구와 모색을 거듭해 온 일단의 진보적 지식인의 역사적 역할은 아직도 중차대한 것이다. 다만 이제 보아야 할 것은 이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이론의 분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활동의 장 역시 多樣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전교조, 민교협, 교수협의회에 이어 합법진보정당 그리고 경실련과 같은 시민운동단체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찾는 교수들이 나타났으며 향후 이러한 場은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이 속에서 과거와 같은 어용 대 민주주의 도식으로 파악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진다.

단약에 한국사회가 가까운 장래에 정상화된다면 혹은 최소한도 정권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이 더 이상 시대적 과제가 아닐 때에는 교수의 현실참여란 기본적으로 專門性에 입각한 사회 각 부문에서의 두뇌와 지성으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에 교수집단은 '時代의良心'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요구받게 될 것이며, 연구자와 운동가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사실 지년간 30년의 한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평범한 시민이 혹은 소박한 양심이 시대의 격랑 속에서 재야인사, 직업운동가 심지어 혁명가로 전화하는 일을 목도하였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는 개인의 불행이자 재능의 낭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시대의 비극이었으며 혹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대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이제 중지되어야 하며, 과거와 같은 재야투쟁은 어쨌건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敎授의 現實參與은 이제 그것이 민주화투쟁의 연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개인과 집단의 고도의 연구성과와 이에 근거한 說得力에 기초할 때에만 생명력을 지닐 것으로 여겨진다. ■